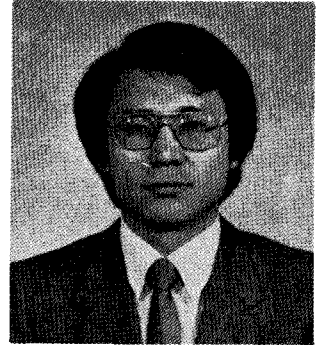


식량안보차원에서 농축산업생산 기반을 보호하고 자급력을 강화해야



송 병 국
(서부배합사료 영업부 차장)

1. 머리말

오늘날의 세계경제질서는 밖으로 자유무역의 탈을 쓰고 안으로 보호무역의 장벽을 더욱 높이 쌓아가는 新보호무역주의로 치달고 있으며 석유와 식량, 그리고 모든 자원은 순수한 경제재의 차원에서 벗어나 전략물자화 하였고 자원 내셔널리즘의 세계적 추세는 점차 두드러지고 있다.

대외지향적(對外指向的)인 개방경제체제를 지향하지 않으면 안되는 우리의 경제체질이나 산업구조로 인하여 솔선적인 수입개방의 대내외적 압력을 받고 있는 농축산업의 현실은 국가적 식량의 안정적 공급이라는 막중한 책임을 지고 있는 점에서 참으로 심각한 국면에 처해 있다.

2. 농축산물 수입개방으로 인한 영향

미국의 신보호무역주의에 의한 시장개방압력이 점차 고조되는 가운데 농축산물의 수입개방 움직임이 구체화되고 있다. 이는 미국이자국의 보호와 이익에만 급급하여 무역외적인 압력을

가하므로 무역정책 자체의 모순을 들어내고 있는 것이다.

그것은 우리의 농업에서는 벌써 적용된지 오래된 사실로써 미국의 PL 480 원조 이후 피원조국의 입장에서 의무적으로 소맥에 대한 수입의무와 부담을 감당하면서 부터이다. 식량의 부족상태 속에서도 미국산 수입소맥이 우리의 식단에 정착하기 까지에는 많은 계몽과 시장개척비가 투입되었고 10年이라는 세월이 지난 후 어느새 수입소맥은 사실상 주곡(主穀)의 위치를 점하게 되었다. (표 1) 아울러 사료곡물도 그 대부분(수요량의 95%)을 수입에 의존하게 되었고 70년대 후반이래 식량자급률의 저하가 여기에서 연유되었다. (표 2)

급증하는 축산물 수요의 충족과 식품 가격의 안정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사료곡물의 수입확대는 불가피한 것으로 이해되나 1979년의 대폭적인 수입확대(전년의 61%증가)는 돼지고기, 양계산물(계란등)의 공급과다를 초래하였고 이에 따른 가격폭락현상 그밖의 초식가축에 대한 농후사료의 공급과다 현상으로 인하여 낭비지향적인 수입농산물이 되고 말았다. 농축산업에

●특집 / 나의 의견

표 1. 곡종별 수급추이

(단위 : 千M/T)

곡종별	수요			생산		
	1965(A)	1980(B)	B/A(%)	1965(C)	1980(D)	D/C(%)
쌀	3,925	5,786	147.4	3,954	5,136	129.9
보리쌀	1,377	1,407	102.2	1,459	811	55.6
밀	682	1,924	282.1	184	92	50.0
옥수수	97	2,517	2,594.8	35	149	425.7
콩	163	733	449.7	163	257	157.7
서류	936	515	55.0	936	515	55.0
잡곡	133	98	73.7	133	88	66.2
계	7,313	12,980	177.5	6,864	7,048	102.7
미곡제외	3,388	7,194	212.3	2,910	1,912	65.7

자료 : 농수산부 식량국

표 2. 곡물자급현황

년도	품목	주곡 (쌀+보리쌀)								
		계	쌀	보리쌀	밀	옥수수	두류	서류	기타	
'65		93.9	100.7	106.0	27.0	36.1	100.0	100.0	100.0	102.1
'70		80.5	93.1	106.3	15.4	18.9	86.1	100.0	95.9	96.4
'75		73.0	94.6	92.0	5.7	8.3	85.8	100.0	109.0	93.9
'76		74.1	100.5	97.9	4.5	6.7	74.4	100.0	100.0	99.8
'77		65.1	103.4	53.4	2.3	6.2	67.5	100.0	100.0	91.8
'78		72.6	103.9	119.9	2.1	6.0	59.3	100.0	100.0	106.4
'79		59.8	85.7	117.3	2.4	3.4	43.4	99.8	89.3	90.7
'80		54.3	92.1	57.6	4.8	5.9	25.1	100.0	89.3	87.3
'81		43.2	66.2	72.7	2.7	6.1	29.7	100.0	89.1	67.3
'82		53.0	93.7	85.9	3.4	4.9	32.4	100.0	22.5	91.8
'83		50.2	97.7	119.9	6.0	2.7	25.7	100.0	18.1	100.2
'84(계획)		50.5	101.0	122.9	0.0	3.4	24.5	100.0	2.7	103.6

자료 : 농수산부 양정국

서 국제경쟁력이 없는 우리나라는 소맥 및 사료곡물의 만성 수입국이 되어버렸고 생산기반은 완전히 붕괴되었으며 1970년만 하더라도 15.4%의 자급률을 유지했던 국내산 소맥은 1982년의 경우 3.4%에, 대두는 70년의 자급률 86.1%에서 82년 32.4%로,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사료곡물인 옥수수는 70년의 18.9%에서 82년 4.9%로 떨어져 멸종의 위기를 맞이하고 있다. 80년대 중반까지의 제 5 차 경제사회개발 5개

년 계획에서 밝히고 있는 농축산물에 대해서는 경제성이 있는 품목에 한하여 증산을 유도하고 공급부족량은 수입으로 대응한다는 것이다. 이 같은 사실에서 미루어 볼 때 80년대 중반까지의 식량정책도 수요측의 증가를 불가피한 사실로 받아들이고 부족량은 수입의 확대에 대처해 나가겠다는 것일 뿐 자급력 및 생산력을 강화하기 위한 적극적 대책은 별로 엿보이지 않는다. 이같은 관점에서 보면 앞으로의 농축산정

책 또한 비교우위의 논리를 합리적인 구실로 삼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수입정책의 결과로 말미암아 우리는 1978~79년도에 걸쳐 쇠고기 수입파동을 겪었고, 1983년~84년에 걸친 비육우 및 쇠고기의 무분별한 수입으로 인하여 현재 엄청난 시련을 겪고 있다.

79년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자료에 의하면 쇠고기수입으로 인하여 쇠고기소비는 17.6%나증가시킨 반면 약 5.8%이상의 한우 농가를 탈락시키는 역효과를 가져왔고 농가소득, 농촌농가의 한계자원 유희화(限界資源遊休化), 장기적인 농축산업 기반의 축소가 일어났다.

이외에도 여타 축산업에 까지 파급효과를 몰고와 돼지고기 소비를 2.5%, 계란소비는 15.8%나 감소(대체수요)시킴으로써 계란, 육계, 돼지 가격의 폭락현상을 빚어냈고 축산업 전반의 경기위축을 보게 되었으며 어렵게 이룩하여 왔던 생산기반의 붕괴로 말미암아 농축산업자의 탈락현상이 일어났다.

이미 우리는 주곡의 일부와 사료곡물의 거의 대부분을 자유무역의 시장기능에 맡기고 있는데 오히려 이것도 쌀이나 보리의 경우와 같이 정부관리로 전환시켜야 할 입장이다.

그런데 하물며 추가 농축산물의 수입개방을 서두른다는 것은 수많은 영세농축산업 생산자의 생계를 위협하는 것이며 국내유희자원 또는 미이용자원을 개발 이용한다는 장기적인 국가경제적인 기회비용을 포기하겠다는 것이다.

3. 식량 자급력 강화의 중요성

농축산물 수입개방의 문제는 식량안보적 차원에서 보다 더 신중하게 다루어져야 한다. 식량은 석유나 공산품과는 달리 상품자체가 지니고 있는 특성에다가 조금의 공급변동만 있어도 굶주림이라는 극단적인 사태를 몰고 온다.

그러므로 식량의 공급불안은 사회불안과 정치문제를 유발시키는 직접적인 원인으로 작용하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식량 자급력의 유지강화는 당면한 농업문제이자 정치 또는 사회문제인 것이다.

식량의 대외의존도가 높을 경우 불측(不測)의 사태 발생으로 수입을 제한받거나 수입중단이 되었을 경우는 다음과 같다.

첫째, 국제분쟁이나 수출국의 하역의 파업, 그 밖의 不測 사태발생으로 수입로가 두절되거나 마비되는 경우,

둘째, 주요 수출국의 흉작으로 수출이 제한되거나 주요 수출국과 수입국이 동시 흉작으로 수입량이 제한되는 경우이다. 1973년 식량파동 때, 1980년 쌀 흉작 때 그리고 두 차례의 석유 파동 때 우리는 수입국의 고통을 충분히 경험했고 자원의 확보 경쟁에는 선린도, 우방도 있을 수 없다는 국제사회의 냉엄한 현실을 눈여겨 보았다.

4. 외국의 농축산업 보호정책과 우리의 현실.

세계로 눈을 돌려 그들의 농축산업정책을 다시 재고할 필요가 있다. 우리에게 농축산물의 수입개방 압력을 넣고 있는 미국-이미 우리는 상당량 개방하고 있지만-의 경우를 보자.

기계화된 농업생산비 절감을 위해 석유류 등을 농민에게 파격적으로 낮은 가격에 공급하고, 토지구입확대와 영농에 필요한 각종 자금을 장기저리로 충분히 유지해주며 1930년대의 패리티가격보상제도와 CCC(상품신용공사)에 의한 농축산물의 수매정책을 시행해 왔으며 우유등의 가격안정을 위한 유통협정, 유통질서법, 최근의 PIK 프로그램 실시, 곡물수출 보너스제 실시 등 철저한 농업보호조치로 일관되어 오고 있다.

EC의 경우도 역외(域外)제국에 대해서는 무역장벽을 두텁게 구축하고 특히 농업분야에 있어서는 공통농업정책을 채택해서 보호하고 있다. EC역내의 농산물 가격은 국제가격보다 일반적으로 높은 수준에 있으며 축산물의 경우에는 3배 내지 4배가 높은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그러나 국제가격에 의해서 농산물이 수입 대체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하여 EC는 수입농산물에 대하여 역내의 가격과 같거나 약간 높게

●특집 / 나의 의견

표 3. 1991년도 주요 품목별 총수요량 및 자급률

(단위 : 千M/T)

품 목	총 수 요 량			생 산 량 (B)	자 급 륜 (B/A)
	식 용	비 식 용	계 (A)		
곡 물	8,811	7,079	15,890	7,849	49.4%
쌀	5,531	351	5,882	5,882	100.0
보 리	269	403	672	672	100.0
밀	1,818	396	2,214	177	8.0
옥 수 수	449	4,635	5,084	197	3.9
콩	408	962	1,370	250	18.2
기타두류	76	17	93	93	100.0
감 자	91	31	122	122	100.0
고 구 마	155	284	439	439	100.0
잡 곡	14	3	17	17	100.0
채 소	8,258	2,680	10,938	10,938	100.0
과 실	1,821	328	2,149	2,149	100.0
육 류	806	-	806	780	96.8
쇠 고 기	196	-	196	170	86.7
돼지고기	431	-	431	431	100.0
닭 고 기	179	-	179	179	100.0
계 란	485	-	485	485	100.0
우 유	1,839	-	1,839	1,839	100.0
어 패 류	2,506	-	2,506	2,506	100.0
참 깨	47	-	47	12	25.5
유 채	56	+	57	57	100.0

자료 : 한국 농촌 경제 연구원, 「장기식량 수급에 관한 연구」

경계가격(最低輸入價格)을 설정하고 이 가격과 국내가격과의 차액을 과징금으로 징수하는 이른바 수입과징금제도(輸入課徵金制度)를 채택하여 실시하고 있다. 이는 역내 농업소득을 보장해 주고 농산물을 수출하려 할 때는 수출보조금으로 보전하여 주었다.

스위스, 스웨덴 등 농업선진국에서도 한결같이 자국농업축(自國農畜業)에 대해 철두철미 보호정책으로 일관하고 있다.

스위스의 경우 세계 유수의 산악의 나라로서 비록 경사도 45도를 전후한 山地이지만 훌륭한 草地牧場을 만들었고 밀과 草사료, 포도가 재배된다. 그리고도 모자라는 식품은 EC 국에서

수입되나 그 판매가격은 어디까지나 자국 농축산물의 생산에 마이너스효과를 주지 않는 수준의 아주 높은 값으로 판매되고 있다.

일본에 있어서 사료곡물의 수입은 정부에서 관여하지 않으므로 축산업자들이 시장상황에 따라 소비수준을 변화시키고 있다. 그러나 산물의 도입 및 판매에 있어서 생산자단체에 의한 소비자단체와의 의견조정과정을 통해 절대적으로 생산인센티브를 우선하는 합리적 운영방식을 취하고 있다.

이처럼 세계 어느 나라의 농업도 거의 예외없이 국가의 최우선정책으로 보호를 받고 있음을 주지의 사실이다.

그러나 전혀 무방비 상태에서 수입개방의 강한 압력을 받으며 전전긍긍하고 있는 한국농업의 현실은 식량안보라는 막중한 책임을 제대로 감당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현실을 보자. 식량자원의 낭비현상이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다. 막대한 달러를 지불하고 구입한 농후사료의 과다급여현상, 축산물의 공급과잉 현상, 축산물 가격의 폭락으로 계란은 벌써 우리나라에서 열등재가 되었다는 현실, 사료자원은 낭비되고 있고 축산업자는 도태의 위기에 처해 있다.

배합사료의 덤핑 판매 현상, 일산 700~800 M/T 규모의 과잉시설투자된 배합사료공장, 정상가동을 위한 자원낭비적 판매경쟁. 결국 달러를 덤핑하고 있다.

외채 \$ 431억의 엄청난 현실 앞에서 동물성 단백질의 과잉섭취로 인해 문제가 일어나고 있다. 이러한 낭비지향적 소비풍토는 어디서 왔나? 어떠한 정책으로 이렇게 되었나? 누구 장단에 춤을 추었던가?

정책입안자도, 생산자도, 소비자도 깊이 반성할 때이다.

5. 결 론

대외지향적 경제정책의 수행이라는 근시안적

입장에서 비교우위의 허구적 이론을 구실삼아 농축산물 수입개방을 강행할 경우 아직도 그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있는 식량자급 생산기반을 한꺼번에 흔들리게 할 것이며, 국가 백년대계의 차원에서 무엇보다 식량안보가 국가안보의 기초적 구실을 한다는 것을 깊이 인식할때 재삼 고려되어야 한다.

그리고 (표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국민식량의 절반이상을 해외에 의존해야 하는 오늘날의 한국농업의 과제는 시급하다. 현시점에서 우리보다 식량자급율이 높은 선진국들도 1, 2차대전시의 경험과 세계곡물시장의 구조적 불안정이라는 여건아래 이미 이 사실을 깊이 인식하고 비교 우위의 관점을 떠나 일정수준 이상 자급률을 국가정책의 목표로 삼고 있다. (스웨덴의 경우 평시는 80%, 전시는 90%)

우리도 이 시점에서나마 적극적 정책 차원에서 증산의 촉진, 소비의 억제 내지는 합리적 표준식단의 정착, 국내부존자원활용, 축산물의 고가정책, 수입부과금제도의 도입 등을 통하여 농축산업 생산기반을 보호, 확충하고 자급력을 강화하여 외환절약의 근본적 해결을 모색하는 식량안보의 기반 구축을 서둘러야 한다.

시세속보 · 사료관측업서 노계 및 병아리시세업서

●구독문의 : ☎ (752) 3571~2

●구독방법 : 우편환 또는 온라인으로 송금

농 협 : 097-01-000953 (대한양계협회)

제일은행 : 105-10-041317 (대한양계협회)